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바로보자

아래 글은 농업 부분에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국농민총연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우루과이라운드가 있었듯이 현재는 도하개발의제(DDA)라는 이름으로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모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이해 당사국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무역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을 국가간에 맺는다. 투자협정이 자본의 투자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은 국가와 국가의 제반 무역에 있어서 각 국가가 처한 조건을 무시하고 국가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 관세 등 무역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2.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세계적 대세라던데?

지금은 그렇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중심의 WTO체제아래서 이들은 시장쟁탈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 각국의 협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세일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없어지고 WTO가 출범했듯이, 또한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개발도상국과 NGO단체들에 의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 그 어떤 변화된 시기가 올지 모른다.

문제는 현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나라 어느 조건에 있는 국가와 체결하는 것이다. 국가들이 농업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3.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

우리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농업이 취약한 도시국가인 싱가폴과 체결하였고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려고 한다. 또한 일본은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 때문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칠레와의 협정에서 대다수 농업품목을 예외로 하려하고 있고 또한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두었으며 호주와의 협정을 앞두고 농산품 예외 규정을 논의 중이다. 다른 여타의 선진국들도 농업은 예외로 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피해가 예상되는 많은 품목을 예외로 하고 있다.

4. 농업부문에 발목이 잡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으면 무역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던데?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무역의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각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농업부문 때문에 협상이 잘 안되고 있고 지지부진하기도 한다.

세계 다른 나라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농업은 공산품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농업부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5. 칠레 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공산품 수출로 인한 이득이 크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아닌가?

이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학계에서도 별로 이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업은 파멸을 면할 수 없는 쳐지여서 정치권에서도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칠레는 외채도 많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나라이다. 따라서 현재 칠레 국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구매력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산품의 관세가 매년 1%씩 감축하여 6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무관세가 된다. 칠레와의 협정을 맺지 않아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농업을 포기하면서 공산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농업의 피해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수입과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를 계산할 수는 있어도 농업의 특수

성으로 연쇄적인 가격폭락, 농업몰락, 농촌환경파괴 등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다.

6. 특별법으로 농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던데?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과수, 축산, 시설원예 농가 중 대다수 농가는 폐원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폐농, 작목전환, 직업전환하라는 것이고 이 농가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농가에 대한 손실보전지원이 아니라 농사포기를 유도하는 탈농 구조조정 법이다. 이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지난 6월20일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 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

7. 국회 비준이 연기되면서 칠레에서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는 등 공업부문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이다. 정부는 2002년 1년 동안의 결과 올 상반

알아봅시다

기(1월 ~4월)를 단순 비교하여 자동차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위에서 5위로 추락했다고 선전하였다. 이것이 마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시장점유율이 추락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작년 동기간을 비교해보면 금액 면에서 시장점유율이 13%에서 13.3%로 오히려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1위이고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국회비준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며, 한국 기업의 수출전략의 실패 때문이다.

8.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국가간 협정을 맺어서 비준하지 않은 사례가 없고 비준을 안하면 국제적인 신뢰추락이 예상되는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시작부터 농민단체, 학계, 정치권으로부터 대상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협상종료후 결과에 대해서는 더욱 잘못된 협상이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협상에 대해서 경제통상관료와 협상책임자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여론을 조작하며 협박조로 협정문에 서명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비준해야 한다고 정치권에게 애걸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역할과 입법부의 역할은 명백히 다르다. 행정부의 협상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최종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공산품수

출에 별로 도움도 안되고 농업만 몰락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가 비준에 반대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독단적이고 밀실협상을 통한 협정체결에 대해 국회가 따져야 하고 잘못된 협정이기에 국회가 비준을 거부하고 다시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고> 멕시코 '나프타 10년' 실패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맺은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멕시코가 이 협정으로 얻은게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1994년 1월 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설치한 임가공 수출단지에 앞다퉈 조립공장을 세웠던 미국 기업들이 최근 2년 동안에만 540곳이나 문을 닫으면서 2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전했다. 협정 옹호자들은 임가공 수출단지 형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기업들이 중국 등 인건비가 더 싼 아시아지역으로 대거 옮겨지면서 이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지 9년 만이 지난 지금 멕시코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고 지난 2년 동안 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94년 8%에 이르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3% 이하로 뚝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2위의 수출국 자리도 최근 중국에 내주는 등 무역 면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멕시코로서는 앞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2000년까지는 멕시코가 많은 혜택을 누렸다. 93년 518억달러였던 수출은 2000년 1664억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임가공 수출단지 활성화 덕분에 대미 수출이 425억달러에서 1476억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난데 주로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기업들이 좀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값싼 노동력'이라는 멕시코의 유일한 무기가 힘을 다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 발효 예정이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도 멕시코 농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우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마찰이 심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농업협상 대표 엘런 존슨은 최근 두 나라 무역 관계가 "전환점"을 맞았으며 무역보복 위협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나프타를 비판하는 이들은 나프타가 멕시코에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쟁길 시간을 줬을 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문제는 무역협정 자체가 아니라 멕시코 정부의 안일한 태도라는 주장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나프타 10년이 멕시코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태국 FTA, 농업 제외될 듯

일본과 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초기단계에는 농산물 분야가 제외될 가능성에 큰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농업무역관에

따르면 태국의 특신 수상이 일본의 농업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부터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국인 태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 5월말 검토를 끝냈으며, 현재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태국과의 FTA 체결은 정부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일본의 농업분야에 민감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제외 품목으로 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인 쌀·설탕·타피오카·가금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태국 기업들은 '농산물 분야를 제외한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FTA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며, FTA의 최종 목표는 일본 농산물 시장의 장벽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처음으로 자유무역 체결을 했으며, 농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국양특